



# 남·북 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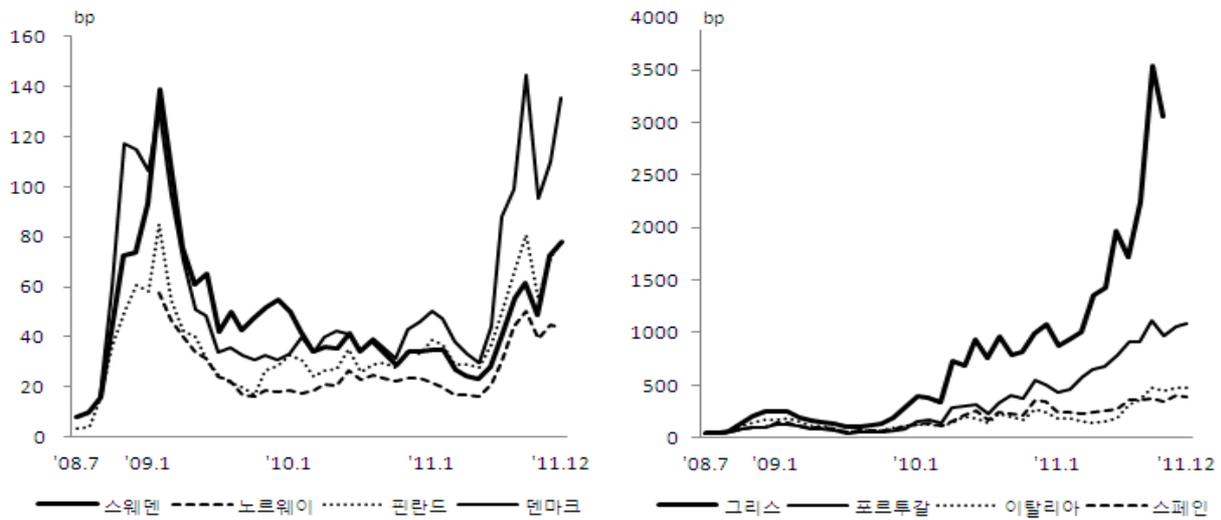
이정환 선임연구원

## 요약

■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확장 → 경제성장 → 세입증대'에 따른 재정수지개선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렸으나, 북유럽 국가들은 1993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제도 개혁과 연구개발 등 미래를 위한 지출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여력 확대 및 재정건전화를 도모함.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확대 추세로 재정지출 규모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잠재성장을 하락 등으로 재정수입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 남유럽 4개국은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였으나 북유럽 4개국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CDS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임.

〈그림 1〉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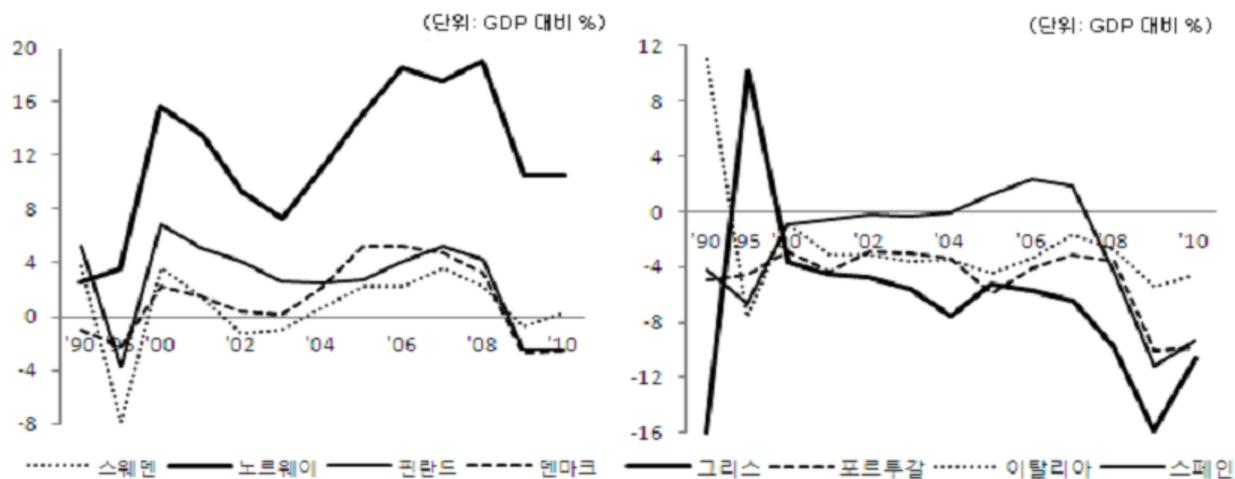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스웨덴(78.1bp), 노르웨이(43.8bp), 핀란드(77.9bp)<sup>1)</sup>의 경우 최근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합의되지 못하면서 CDS 프리미엄이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인데 반해 그리스(3,060.3bp), 포르투갈(1,088.4bp), 이탈리아(481.6bp), 스페인(393.3bp) 등은 매우 높은 상황임.

■ 북유럽 4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GDP 대비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남유럽 4개국은 동 비율이 위험수준을 넘어섬.

- 북유럽 4개국의 경우 2010년 현재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대이며 재정수지 비율은 흑자 또는 3% 미만의 적자를 기록함.<sup>2)</sup>
- 2010년 남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대체적으로 90%를 상회하며<sup>3)</sup> 재정적자 비율은 9%를 초과함.

〈그림 2〉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재정수지 추이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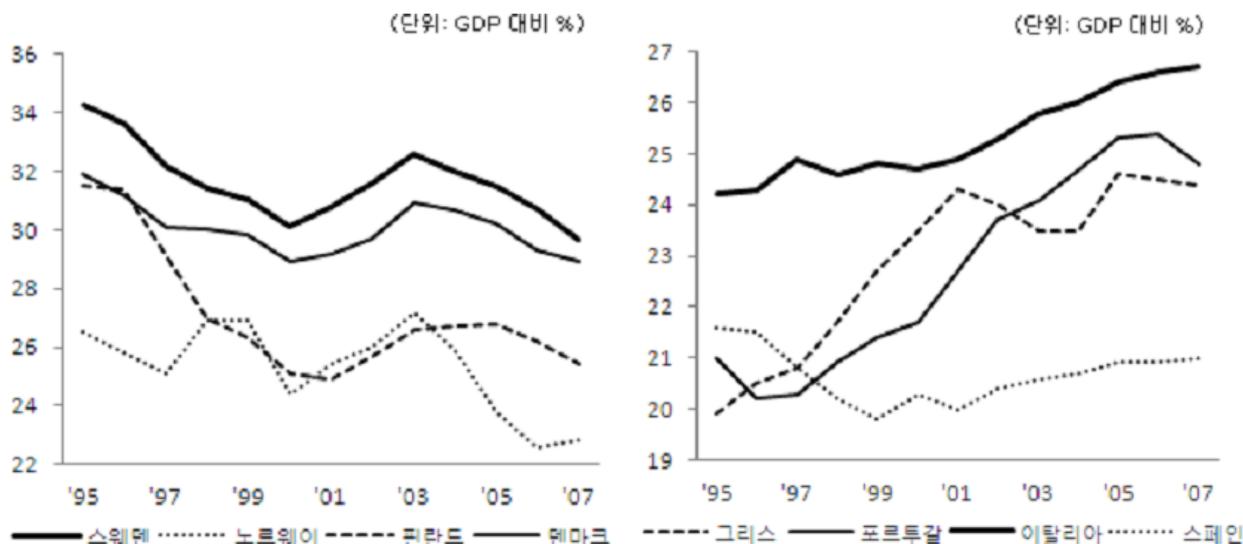
■ 남유럽 4개국의 재정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북유럽 4개국의 재정이 건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됨.

- 첫째, 북유럽 국가들은 금융자유화와 자산버블에 따른 후유증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함.

1) 덴마크의 CDS 프리미엄은 2011년 9월 처음으로 100bp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12월에는 135.7bp를 기록 중임.  
 2) 2010년 현재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재정수지는 각각 GDP 대비 10.6%, 0.2%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덴마크는 각각 2.5%, 2.6%의 적자를 보임.  
 3) 2010년 현재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각각 144.9%, 93.3%, 118.4%, 61.0%이며 이들의 재정적자 비율은 각각 10.6%, 9.8%, 4.6%, 9.3%임.

- 둘째, 1993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함.
  - 스웨덴은 조기퇴직연령 상향조정, 조기퇴직자의 연금 수급액 감축, 최근 15년간 평균에서 취업기간 전체 평균으로 연금 지급액 기준 연장 등 연금개혁을 단행함.
  - 노르웨이는 실업보험 수령자격을 강화하고 1.5~3년으로 실업보험 수령기간을 단축함.
  - 핀란드는 근로자의 실업보험료 납입률 인상, 연금 납입기간 연장, 공공부문 연금 지급액을 민간부문 수준으로 인하함.
- 셋째, 복지지출을 감축하여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함.
  - 스웨덴은 고령연금지출에 상한을 도입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핀란드는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을 삭감함.
  - 북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2000~03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하락하였으나,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그림 3〉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사회보장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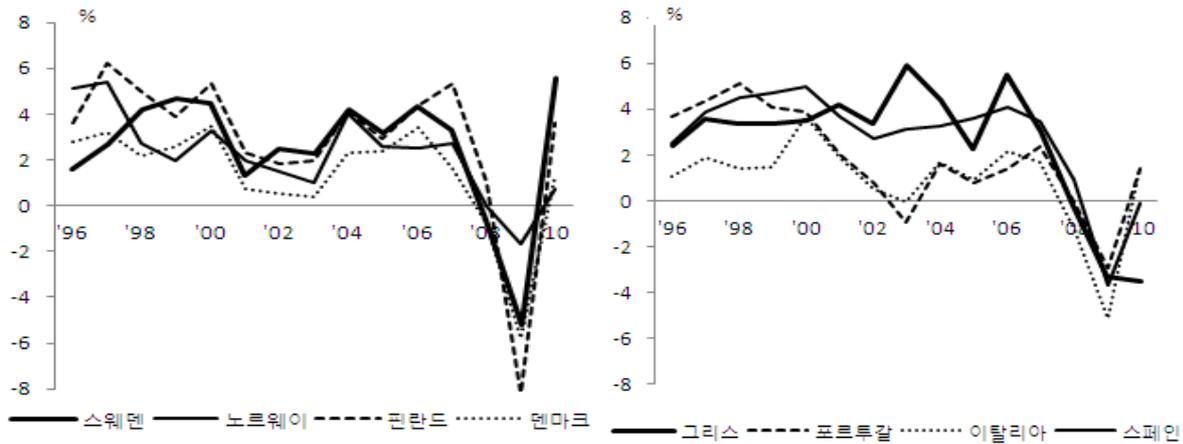
자료: Eurostat(2011, 12), Europe in figures.

- 넷째, 높은 산업경쟁력,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경제성장 등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함.
  - 스웨덴 자동차, 핀란드 정보통신, 노르웨이 에너지, 덴마크 풍력설비 등 북유럽 4개국 각기 특화된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토대로 경상수지 흑자<sup>4)</sup>를 유지함.

4)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2010년 중 각각 230억, 387억, 30억, 130억 유로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 EU 경제·금융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EU 평균 경제성장률은 1.6%인 데 반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2011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0%, 2.4%, 3.1%, 1.2%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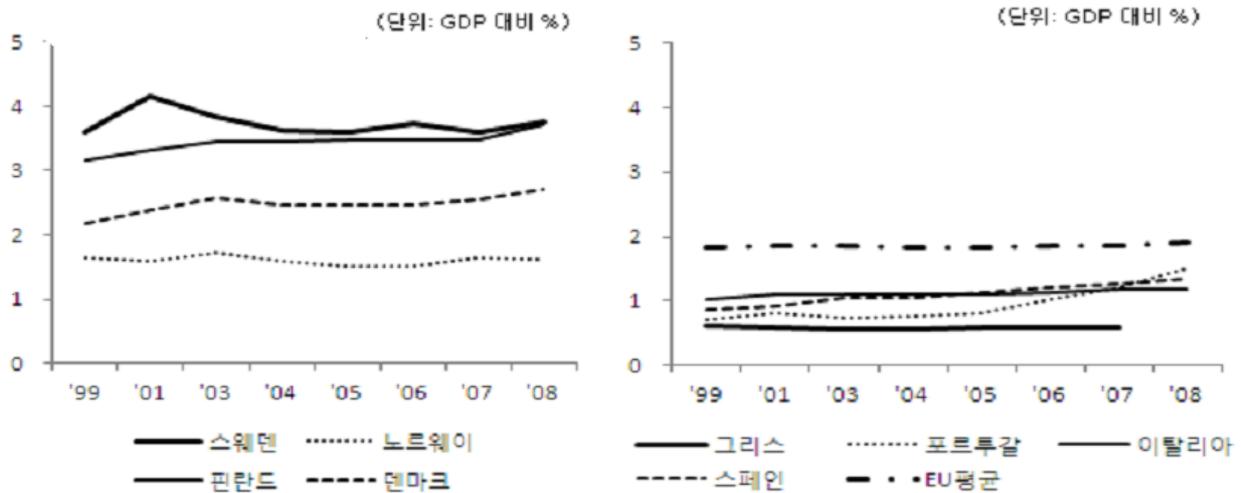
〈그림 4〉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Eurostat.

- 다섯째,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지출을 줄였으나, 연구개발과 교육 등 미래를 위한 지출은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와 재정여력(fiscal capacity)을 확대함.

〈그림 5〉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R&D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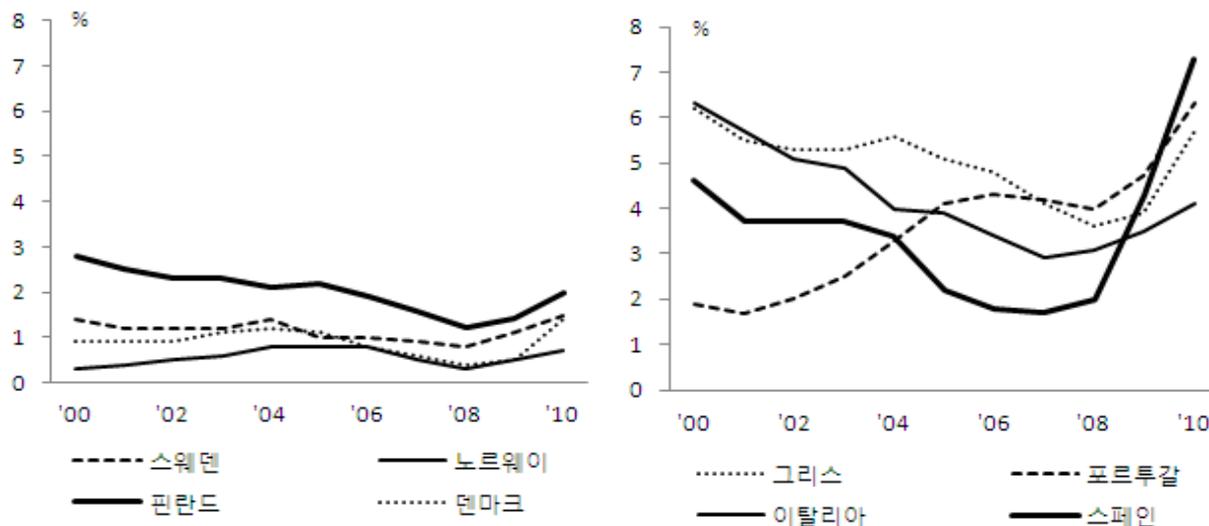


자료: Eurostat(2011, 12), Europe in figures.

- 남유럽 국가 중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재정확장 → 경제성장 → 세입증대’에 따른 재정수지개선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림.

- 그리스는 1996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2~6%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재정지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림.
  - 경제가 회복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재정긴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후유증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
- 포르투갈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저성장을 지속하는 등 경제가 활력이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자가 만성화 됨.
  - 10년간 포르투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3%이며 이는 고실업율과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짐.
- 이탈리아는 저성장, 낮은 국가경쟁력,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재정수지개선 선순환 구조가 생성되지 못함.
  - 10년간(2002~11년) 이탈리아 경제성장률 평균은 0.3%이며 낮은 교육수준, 남북 간 경제적 격차 확대, R&D 및 혁신 부족 등으로 저성장세가 이어짐.
  - 노동시장의 경우 유럽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은 편이며 노동자 그룹 간 격차가 큼.

〈그림 6〉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실업률 추이



자료: Eurostat.

- 스페인은 금융부문 중심의 양호한 성장을 바탕으로 다른 남유럽 국가에 비해 재정상태가 양호했으나, 2008년 금융부문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재정위기를 겪게 됨.
- 스페인은 고용창출의 주 원동력이었던 건설경기가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했고, 부실 대출에 크게 노출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짐.

- 저축은행의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현재 55.7%로 일반은행보다도 높음.
-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악화로 이행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나타남.
  -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재정지출 관리에 실패함.
- 우리나라는 복지확대 추세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재정수입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한국조세연구원은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노동, 교육 등 5개 항목의 고령화 관련 지출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GDP 대비 지출규모가 2004년 8.5%에서 2050년 22.4%로 13.9%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축률 및 민간투자 감소, 경제의 서비스화 등에 따라 성장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가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북유럽 국가와 같은 재정수지개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조세감면 축소, 공적자금 투입 민간기업의 재민영화 등을 통해 세수여력을 늘리는 한편,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과 연계하는 재정규율 강화가 필요함.
    -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인 재정여력 확대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음. **kiri**